

통치성의 공간들
한국의 정치지리를 고려한 시론적 검토*

Rethinking the geography of governmentality
on the South Korean context

김동완**

이 글은 공간을 조형하는 권력의 정치적 논리로서 푸코의 통치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그리고 한국의 경험에 대한 분석도구로 삼을 때, 서구와 다른 한국의 정치지리에서 우리가 문제시해야 할 측면을 시론적으로 검토했다. 이를 위해 영토와 도시를 렌즈로 푸코가 제시한 서구 국가의 통치화 과정을 읽어내려 했다. 본 연구에서는 푸코의 통치성 강의를 주된 텍스트로 삼았다. 그리고 강의 전반에 산재되어 있는 통치성의 지리적 차원을 푸코 사유의 흐름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재구성했다. 결과물을 놓고 보건대, 푸코의 통치성에서 영토와 도시는 통치의 배경이나 맥락을 형성하는 대상이 아니라, 통치의 등장과 변화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권력과 통치의 문제가 생산하는 공간의 구체적 형태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통치성의 한국적 변이 가능성을 가능해보고,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우리의 정치지리적 특성이 개입하는지 시론적으로 검토했다. 이를 통해 동아시아적 문맥을 가진 탈식민국가로서, 분단과 냉전의 특수한 환경을 겪은 국가로서 경험연구에서 고려할 몇 가지 단절점을 제시할 수 있었다.

주요어: 푸코, 통치성, 영토화, 도시화, 도시계획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30-B00209).

**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전임연구원(dw.gimm@gmail.com)

1. 서론

하비(Harvey, 2005)는 그의 저서 『제국주의론』에서 아리기를 인용해 두 가지 공간 조형의 논리를 소개한다. 하나는 ‘권력의 자본논리(capital logic of power)’이고 다른 하나는 ‘권력의 영토논리(territorial logic of power)’이다. 하비는 이 둘을 긴밀하게 연결되고 뒤엉켜 있으나 서로에게 환원되지 않는 논리로 설명한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공간연구 분야에서 정치적 공간은 자본의 공간에 비해 부차적으로 다뤄지거나, 자본의 공간생산에 조우하는 우연적인 상황으로 주변화되어왔다. 게다가 정치적 공간을 분석할 충분한 이론적 도구를 가지고 있지도 못했다. 선거결과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제외하고는 다원주의나 엘리트주의를 극복할 이론적 자원이 많지 않다. 행위자들과 연합,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상대적으로 임시적인— 제도들을 배회하는 이유다. 조절이론적 국가공간론이 이러한 갈증을 일부분 해소해주는기는 하지만, 경제적 전략에서 온전히 자유로운 정치권력의 공간을 이론적으로 보증해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자본논리’에 얽혀 들어 있는 ‘영토논리’는 따로 분별해 따져볼 수 없는 대상인가? 필자는 이 문제 해결의 단초를 프랑스 철학자 푸코의 ‘통치성(gouvernementalité)’ 연구에서 찾아보려 한다.

푸코는 1977~1978년 콜레주 드 프랑스에서 진행한 강의 <안전, 영토, 인구>에서 서구 권력 메커니즘의 변화를 추적한다. 이 작업은 그 스스로 주장하듯이 권력과 통치라는 보편적 인간행위를 통해 국가(state)를 바라보는 방식에 대한 것이다(푸코, 2011: 168).¹⁾ 푸코는 미시권력의 이론가로 불렸다. 어찌면 거시권력, 특히 국가론의 부재에 대한 비아냥거림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진위를 떠나 푸코에게서 국가와 같은 거시권력론을 찾아보기 힘들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안전, 영토, 인구> 강의를 통해 이런 비판을 불식시키는 한편, 기존 국가 연구의 맹점에 도전했

1) 푸코의 2011년 저작 『안전, 영토, 인구』(난장은 이후 STP로 줄여 통칭하기로 한다.

다. 이른바 국가의 계보학이 등장한 것이다. 푸코는 국가를 하나의 실체로 분석하지 않았다. 그에게 권력은 힘의 장(field)이자 다중다기한 관계의 복잡한 망(net)이다. 권력은 모든 관계에 내재되어 있으며 행위를 통해서만 드러난다. 권력은 소유하거나 담아둘 수 있는 실체가 아니다. 일단 힘의 장을 고려하는 순간, 고립된 입자로서 권력은—엄밀한 의미에서—성립하기 어렵다. 따라서 권력의 실체가 아니라 그 권력이 드러나는 실천, 그리고 그 실천이 정당화되고 합리화되는 방식이 중요해진다. 통치성(gouvernementalité)은 이러한 권력론을 배경으로 제시되었다.

통치성은 “권력관계가 갖는 유동성, 변형가능성, 역전가능성 내에서 권력관계의 전략적 장(場)”(푸코, 2007: 283)이다. 이 권력의 장에서 ‘품행의 경영’ 혹은 ‘품행의 지도(conduire des conduits)’가 확정되며, 이것이 통치를 특징짓는다. 간단히 말하긴 어렵지만 푸코에게 있어 통치한다는 것은 최종적으로 인구 전체와 개개인의 품행을 동시에 조정하는 것과 같다. 여기서 품행은 폭력을 통해서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세밀하고 정교한 장치들을 통해 개개인의 순응을 이끌어내며 형성된다. 푸코가 풀어내는 통치의 역사는 이 장치들의 발달사이기도 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국가는 이 역사에서 등장하는 하나의 ‘돌발사건’(STP: 346)으로 기록된다. 국가가 있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를 위해 국가가 발명되었다는 것이 그의 견해이다. 일견 당황스러울 수도 있지만, 국가 연구의 최전선에서조차 국가를 단일한 대상으로 정의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우연적 결합’이나 ‘제도적 상상발’로 국가의 형성 혹은 구성을 강조한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그리 낮은 주장은 아니다(cf. Jessop, 2000).

그런데 푸코에 의해 밝혀진 국가의 계보학과 권력 메커니즘은 지극히 지리적인 현상에 닿아 있다. 그 출발에서부터 중요한 변화의 분기점마다 공간의 문제들이 또렷이 등장한다. 단순히 통치의 산물로 특정한 공간이 조정되었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중세도시에서 발생한 통치의 난제(難題)들이 주권권력의 영토를 탄생시킨 직접적인 계기였고, 이 영토를 통치하기 위해 수도를 중심으로 한 위계와 순환이 조직되어야 했으며,

발달하는 도시와 그 도시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통치의 기술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했다. 주권권력과 국가의 고안, 수도 중심의 영토화와 공간의 위계, 도시에 대한 압과 영토의 도시화, 통계적 지역과 정상성의 정치까지, 국가의 계보학이라 불리는 푸코의 작업은 근대적 권력 메커니즘의 공간적 차원을 역사의 구체 위에서 기술한다. 하비가 언급했던 ‘권력의 영토논리’를 서구 역사에서 찾는다면, 푸코의 국가 계보학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푸코 통치성의 지리에 대한 연구는 영미권 지리학계에만 보아도 방대한 분량이다. 스투어트 엘든(Stuart Elden, 2007)이나 마르고 헉슬리(Margo Huxley, 2007), 매튜 한나(Matthew G. Hannah, 2000), 크리스 필로(Chris Philo, 1992) 등의 연구가 빈번히 인용되며 지리학계의 푸코 효과를 주도해왔다. 그런데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들은 푸코의 역사적 연구 자체를 문제 삼을 필요가 없었다. 자연히 푸코의 성취를 골간으로 각 국가의 변이를 다양하게 보충하면 충분했다. 즉, 영토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권력 메커니즘의 변화는 푸코의 것을 그대로 취하되, 거기서 공간의 의미를 해석하고 도출하거나 경험적으로 확장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푸코가 발견한 서구의 통치술은 선형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에 대한 고고학적 탐색을 통해 촘촘히 도출해낸 것으로, 서구 근대의 전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러나 탈식민 경험이 있는 국가나 비서구 국가, 혹은—대부분이 그렇겠지만—이 두 층위가 중첩되어 있는 국가에 서구 학자들의 연구를 대입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스피박(Spivak, 1988)이 서발턴(subaltern) 연구에서 푸코를 제1세계 백인 지식인으로 비판했던 것도 푸코의 권력론이 가지는 지리적 한계를 인식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험에서는 서구적 통치를 강제적으로 경험하거나, 자발적으로 수입하게 되는데 기왕에 존재하던 것과의 충돌, 변형은 피하기 어렵다. 비서구 국가의 경우 서구 국가들이 중세 천 년의 시간 동안 경험한 기독교적 관념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푸코가 보았던 품행의 경영은 중세 기독교 세계의 목자-양떼의 관념에 크게 기대고 있

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아시아에 위치한 탈식민국가, 게다가 분단이라는 독특한 상황 아래 있는 한국의 경험에서 공간을 조형하는 ‘권력의 영토적 논리’를 탐색할 때, 서구 학자들과는 논의의 출발선 자체가 다를 수 있다. 서구의 통치성으로 한국의 통치실천을 제대로 묘사할 수 있는지 따져볼 일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행해진 푸코 연구는 푸코 사유에 대한 인문학적 분석이 많았고,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사회과학 연구들도 대개 신체에 대한 생명관리정치 측면에서 통치성 논의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다(cf. 서동진, 2009; 진태원, 2012; 이희영, 2010). 통치성의 공간에 대한 연구가 없지는 않으나 신자유주의 통치성에 의한 주체의 탄생이라는 시각이 훨씬 많다. 공간적 차원에서 접근한 것으로는 장세룡(2010), 도승연(2009), 임동근(2010), 박주형(2013) 등이 있으나, 한국에서 도시담론의 형성과정을 추적해 서구와의 차이점을 판별해낸 임동근(2010)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서구적 통치성 개념들을 국내 사례에 적용하는 경험적 연구들이다. 아직 한국에서 공간의 통치성, 혹은 통치성의 공간에 대한 연구는 초보적인 단계이지만, 차이에 한국의 통치성과 그 공간을 조건 짓는 한국의 정치지리적 특성을 고민해야 할 필요성은 분명하다.

이 논문은 그 출발선을 확인하는 작업이다. 먼저 푸코의 통치성 논의를 공간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구성할 것이다. 이를 통해 서구의 근대국가를 형성하고 지탱했던 정치적 논리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논리들이 어떻게 공간을 조형했는지 확인한다. 한편으로는 국가의 정치적 측면에 공간을 조형하는 기본 논리를 확인하는 작업인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 한 세기 동안 우리에게 ‘이식된’ 혹은 ‘번역된’ 근대의 원본을 확인하는 작업이다. 구체적으로는 서구 통치성에서 공간 조형이 기여한 바, 혹은 거꾸로 통치성의 형성 과정에서 공간이 만들어지는 방식을 푸코가 발굴한 세 가지 장치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를 토대로 전술한 서구의 통치실천과 합리성이 한국의 정치지리 위에서 어떻게 읽혀야 할지에 대한 시론적인 검토작업을 진행할 것이다.

2. 국가, 영토, 도시, 그리고 통치성

푸코가 통치 문제를 본격화한 것은 1977~1978년 강의에서부터다. 푸코에게 통치는 권력의 통사(通史)를 보는 렌즈였다.²⁾ 여기서 국가와 통치의 인과는 역전된다. 앞서 언급한 대로 통치성은 ‘품행의 경영’ 혹은 ‘품행의 통술’이다. 그리고 이것은 거대한 권력 메커니즘과 기민하게 연결되어 있다. 즉, 통치성이란 권력 메커니즘에 의해 다양한 통치의 수준에 관철되는 통치의 합리성을 말한다. 르네상스 이후 19세기까지 수백 년에 이르는 통치의 역사에서 우연한 사건으로 국가가 등장했다는 것이 푸코의 핵심적인 주장이다. 때문에 그에게 중요한 것은 국가 그 자체가 아니라 국가를 조형한 권력 메커니즘이다. 장치(dispositif)³⁾는 이 메커니즘을 인식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론적 개념으로 등장한다(이정희, 2011).

푸코는 역사적으로 세 가지 권력 테크놀로지, 혹은 세 가지 장치를 언급한다: 1) 주권/사법 사법장치, 2) 규율장치, 3) 안전장치. 주권/사법장치

2) 때로 푸코는 ‘통치’를 특수한 역사적 실천을 지칭하는 데 사용하기도 한다. 최소한 국가이성이 고안된 이후, 정확히는 중농주의 이후, 생물학적 서식지(milieu)/개체군(population) 개념 이후, 통계학적 정상성 개념 이후의 통치를 말할 때 별다른 수식 없이 통치라 부르기도 한다.

3) 장치는 『성의 역사 1. 지식의 의지』(2010)에서부터 담론과 ‘권력-지식’의 개념을 보완·확충하는 개념으로 쓰이기 시작해(허경, 2012: 23), 이질적(hétérogène)인 실천, 담론, 기술, 제도 등에 관한 포괄적 개념으로 발전한다(Revel, 2002: 24~25; 허경, 2012: 23에서 재인용). 푸코는 1977년의 한 대답에서 장치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 그는 “담론, 제도, 건축학적 구획, 규칙 결정, 법, 행정적 척도, 과학적 지표, 철학적·도덕적·박애적 명제 등, 간단히 말해서 말로 표현한 것과 표현하지 않은 것을 모두 포함하는 이질적인 집합”으로 정의하면서, “장치 자체는 이 요소들 사이에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하나의 그물망”이라고 부연한다(같은 책). 정리하자면, 장치는 권력을 정당화하는 논리로서 통치이성(raison gouvernementale)에 의해 권력의 관계망 위에서 행해지는 담론적/비담론적 통치실천(pratique gouvernementale) 일체를 포괄하는 분석적 도구에 가깝다(cf. 임동근, 2012: 294). 장치에 대한 분석을 통해 푸코가 원했던 것은 통치를 합리화하는 논리, 그 논리 위에서 행해지는 실천, 그리고 중국에는 ‘종(種)으로서 인간’을 고안하는 안전(혹은 치안) 장치의 출현을 계보학적으로 도출하는 것이었다.

는 주권자가 영토 내에서 배타적으로 행사하는 권력의 메커니즘에 관한 것이다. 이 장치는 주권자로 하여금 신민을 죽게 하거나 살게 내버려둘 권리를 가지게 한다. 허가와 금지의 이항분할, 그리고 금지된 행동을 저질렀을 때 받아야 하는 처벌 유형이 결합해 있다(STP: 23). 주권자의 “죽게 만들고(faire mourir) 살게 내버려두는(laisser vivre) 권리”(푸코, 1998: 278~279)란 전형적인 사법적 논리, 이항분할의 논리를 간명하게 드러내는 표현이다. 그러나 주권/사법장치만으로는 주어진 영토에 대한 통치, 전례 없는 도시 밀도 문제의 해결, 국가 간 경쟁에서의 승리를 담보할 수가 없었다. 여기서 등장하는 새로운 통치술이 규율장치이다. 규율장치는 감시와 교정의 메커니즘을 말한다. 『감시와 처벌』(푸코, 1994)에서 죄인에 대한 규율과 판옵티콘의 감시는 구체적인 공간으로서 감옥에서 푸코가 발견한 서구 통치의 대표적인 장치였던 것이다. 이 장치의 논리는 ‘무엇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무엇을 하라’이다. 죽이지 않고 감시하고 훈육하는 규율장치는 감옥뿐만 아니라, 군대, 공장, 학교 등 미시적 규율 공간뿐만 아니라, 도시의 용도지역이나 신도시 구상, 국토계획에 이르기까지 공간에 대한 전문가의 시선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cf. 스콧, 2010). 국가의 통치 문제에 집중해보면, 규율장치는 푸코가 내치라 불렀던 문제와 연결된다. 그러나 격자와 규율은 소위 ‘국가의 실패’로 불리는 여러 문제에 봉착한다. 시장에 개입하지 말라는 자유주의의 교리는 단순한 이데올로기를 넘어 새로운 통치술로 자리 잡는다(다카시, 2011: 76). 그것이 안전장치(dispositif de sécurité)이다. 푸코는 이 메커니즘을 이전의 권력과 구별해 “살게 만들고 죽게 내버려두는” 권리라 규정한다(푸코, 1998: 278~279).

그런데 푸코가 통치술의 고안과 실천을 분석하며, 당대의 지리적 사건에서 역사적 조건을 찾아낸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장 극적인 대목은 도시화·영토화의 지리적 긴장에서 새로운 통치술의 역사적 조건을 끌어내는 분석이다. 극히 직접적인 지리적 한계상황은 기왕의 권력 장치가 통제하지 못하는 사태로 발전했다. 푸코의 출발점은 명백히 도시 문제였다. 그는 전례 없이 폭증하는 인구밀도의 특이점으로서 근대 도시

를 본다. 인구 밀도의 증가를 설명하는 변수들은 많다. 지배적인 요인이 무엇인지 밝히기는 어렵다. 그러나 밀도 증가라는 결과는 자명한 사실이다. 푸코는 밀도가 발생시킨 문제들과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을 근대 도시 출현과 연관 짓는다. 그중 가장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조건은 성곽과 괴였다. 비록 푸코 자신은 도시의 경제발전에 따라 성벽을 허물게 되었고, 여기서 몇 가지—지금의 용례에서—치안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정도로 간략히 언급하고 있지만, 이후 권력 메커니즘의 변화로 푸코가 제기한 대부분의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서구 중세 해체의 상징적 사건이라 할 만한 중요한 계기였다.

성곽을 가진 도시, 이른바 성채도시는 오랜 역사를 가진 도시의 유형이다. 중세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은 오래 성채도시(라틴어 *burgus*, 성으로 둘러싸인 성읍)였다. 역사적으로 성곽이 가졌던 기능은 크게 세 가지이다. 우선 가장 주요한 기능은 외적에 대한 방비였다. 두 번째는 감시 기능이다. 일일이 개개의 행위를 감시할 기술이 불충분한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통제는 틀어막는 것이다. 남은 하나는 세금징수였다(기로워드, 2009: 107). 성벽은 치안장벽이자 관세장벽이었다. 누가 출입하는지, 무엇이 드나드는지 중세도시는 성벽을 통해서만 이 두 가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14세기부터 이탈리아, 플랑드르 등지에 출현한 상업도시들은 성곽 내 인구의 폭발적 증가를 경험했다.⁴⁾ 증가하는 인구는 주로 성곽 외부에 별도의 공동체를 꾸렸다. 문제는 이 성곽 외부지역의 내부화과정이었다. 당시 관념상 안전과 방비는 성채로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성곽 외부에 2차, 3차로 성곽을 덧대었다(Benevolo, 2003: 291). 또한 화약과 대포의 기술발달로 2중 방어벽이 필요했지만, 이런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도시는 많지 않았다(김병용, 2011: 198). 성벽 건설의 비용 부담은 성벽

4) 벨기에 브뤼헤(Bruges)의 경우 13세기까지 중세 대부분의 기간 동안 3만 5,000 명이 넘지 않던 인구가(기로워드, 2009: 141) 2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Dunton, 1896: 160).

자체를 만들지 않는 도시의 수를 늘렸고, 때마침 발달하던 영토적 방어 체계에 편입하려는 동기로 작용했다. 게다가 성채에 둘러싸인 높은 인구 밀도는 위생과 재해에도 취약했다. 중세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페스트는 17세기까지도 성채도시를 반복해서 공격했고, 1666년 런던시티(City of London)는 3일 밤낮을 타고 난 뒤 성곽과 함께 무너졌다. 그리고 19세기 산업혁명은 유사 이래 경험한 적이 없는 고밀의 인구 집중을 가져왔고, 성곽은 설 자리를 잃게 되었다.

요컨대, 상업적·산업적 성취와 그로 인한 경제지리의 변화는 성채도시에 전혀 없는 밀도를 가져왔다. 부의 축적과 같은 경제적 밀도도 있었고, 덩달아 도시로 몰려드는 사람들의 밀도도 예전과 달랐다. 어떤 쪽이건 중요한 문제는 순환(circulation)이었다. 상인이나 산업자본가에게 자본 순환, 물자 순환의 중요성은 자명하다. 순환은 생산과 소비를 연결해 시장 메커니즘을 완성한다. 자본주의의 지리적 확산이 요구했던 순환은 파괴적일 수밖에 없다. 더 먼 거리를 더 빠른 시간에 닿아야 했고 성곽은 물리적인 장애였다. 위생문제는 또 다른 성질의 순환에서 비롯된다. 사람들의 밀집 - 독기(miasma) 심화 - 병의 확산 - 사망 증가 - 시체증가 - 악취 발생 - 독기 심화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다.⁵⁾ 푸코는 이 두 순환을 ‘좋은 순환’과 ‘나쁜 순환’으로 대비시킨다(STP: 45). 좋은 순환과 나쁜 순환을 구분하고, 나쁜 순환을 감소시켜 좋은 순환을 극대화하는 순환의 조직화를 당시 도시문제의 핵심으로 보았다.

도로는 성곽을 파괴하고 순환을 조직했다. 그러나 성곽 파괴는 아주 실질적인 문제를 야기했다. 푸코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경제적 발전에 따라 도시의 성벽을 허물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야밤에 성문을 닫아 도시를 폐쇄하는 것도, 낮 동안의 왕래를 제대로 감시하는 것도 불가

5) 이른바 독기 이론으로 알려져 있다. Garrison(1929)에 따르면 고여 있는 공기에서 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독기 이론과 넓은 격자형 도로가 그 구역의 환기에 도움을 주어 위생을 유지시켜준다는 생각이 17세기 후반에 이미 나타났으며 18세기에 굳어졌다고 한다(기로워드, 2009: 359에서 재인용).

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거지, 부랑자, 건달, 범죄자, 도둑, 살인마 등 온갖 떠돌이들이 도시로 유입됐고 도시의 안전도는 떨어지게 되었습니다”(STP: 44~45). 바로 안전문제였다.⁶⁾ 성벽이 수행하던 기능을 일순간 대체할 수단은 없었다. 외부로부터 침입을 막고, 도시 내부로 진입하는—부랑자나 도둑과 같은—또 다른 ‘독기’를 통제할 수단이 없었다. 이 중 전자는 영토국가에 위임되었고(김병용, 2011), 후자는 푸코가 내치(police)라 이름붙인 영역으로 이전되었다.

3. 주권/사법 권력의 영토지배와 유럽의 균형

1) 베스트팔렌 조약의 역사적 의미

국가의 영토가 현재의 개념으로 정착된 계기는 30년 전쟁을 종식시킨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이다. 직접적으로 30년 전쟁, 멀게는 위그노 전쟁과 네덜란드 독립전쟁을 포함한 100년 종교전쟁이 이 조약으로 종결되었다. 특히 30년 전쟁을 거치면서 종교전쟁의 성격은 희석되었고, 유럽 여러 민족국가 간의 영토 확정 전쟁, 나아가 신성로마제국의 황제인 합스부르크 가(家)의 패권에 대항하는 국제전의 양상을 띠었다. 실제로 전쟁이 진행되면서 양 진영을 오가며 전쟁을 치른 왕국이 다수 있었다. 푸코에게 30년 전쟁은 제국적 질서와 교회의 보편적 이성 모두에 종말을 의미했다. 그리고 베스트팔렌 조약은 이를 확정하고 제도화하는 사건이었다(STP: 403).⁷⁾

6) 프랑스어에서 *sécurité*는 직역하면 안심, 안전, 치안, 보안 등을 뜻하는 단어로, 치안이나 사회보장제도 등 삶의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장치를 일컫는다. 푸코는 도시의 성벽이 파괴되고 나서 발생하는 문제를 *sécurité*의 문제로 보았고, 뒤에 설명할 안전장치(혹은 치안장치로도 번역된다)로 연결시킨다.

7) 30년 전쟁과 베스트팔렌 조약을 둘러싼 논쟁의 지형을 보면,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영토국가의 제도화가 완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비록 신성로마제국과 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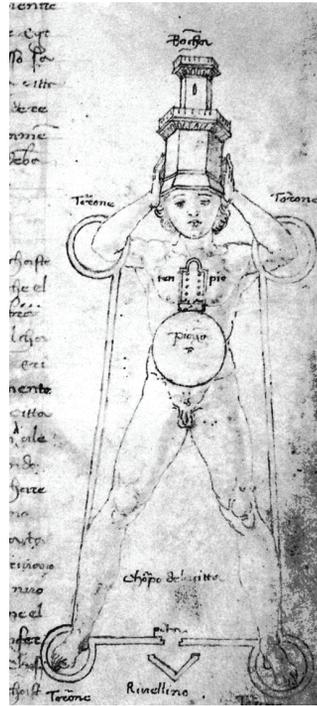
베스트팔렌 조약은 “일체의 종속관계와 의존관계가 없는 절대적 단위”(STP: 396)로서 영토국가가 제도화되었고, 국가 간 경쟁이 촉발된 시점이었다. 영토를 기본 단위로 하는 국가 간 경쟁은 통화순환, 식민지, 해양 지배 등에서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리고 이 경쟁은 “유럽의 균형”(STP: 407~409)이란 공통의 이상을 실현하는 실천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스트팔렌 조약은 일련의 변화를 ‘제도화’하는 선언이고, 변화의 ‘결과’라는 점이다. 조약 이전 15~16세기에 이미 이 새로운 권력 메커니즘은 등장하고 있었다. 푸코는 이 권력 메커니즘에 ‘주권’ 혹은 ‘사법’이란 이름을 붙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30년 전쟁은 종교전쟁의 막바지였다. 당시 유럽은 수세기 동안 종교전쟁의 명목하에 긴 전쟁을 치러왔다. 전쟁은 막대한 비용을 발생시켰고, 이는 왕조 중심의 중앙집권화로 이어졌다. 세계를 개편하고 세금부과권을 독점했으며, 영주들의 특권을 폐지했다. 특히 봉건영주의 ‘사적 전쟁권(the rights to wage a private war)’을 박탈했는데, 군사적 독점은 왕의 권력독점을 강화했다(김범수, 2006: 91). 12세기 이탈리아에서 부활한 로마법은 ‘자신의 영역 안에서 황제’와 같은 지위를 부여받는 관념을 강화시켰고, 보댕에 이르러 입법권을 중심으로 하는 주권 개념으로 발전한다(박상섭, 2004: 103~104). 사법은 주권을 위한 구조물이 되었고, 주권은 법률의 중심문제였다(푸코, 1998: 43~45). 또한 행정기구는 전문적인 법학자들에게 장악되었다(앤더슨, 1993: 26, 49). 이것이 — 15~16세기를 거쳐 17세기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제도화된 — 영토국가 권력 메커니즘으로서 주권/사법 장치이다.

일 소국 간의 절충적 통치는 조약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따라서 푸코의 주장은 새로운 통치술이 정착하고 확산되는 측면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며, 실질적인 영토화 작업은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내치의 시대로까지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베스트팔렌과 17세기 국제정치질서에 대해서는 김준석(2012)과 전재성(2009)을 참고하라].

2) 영토화와 주권의 정치적 효율성

주권권력은 영토화를 동반했다. 주권자를 중심으로 하는 위계적 영토 개념은 수도(首都)를 정비하는 한편, 수도 중심의 순환을 구축했다. 영토를 인체로 보는 관념, 영토에 대한 유기체적 접근이 이를 뒷받침했다. 푸코는 17세기 프로테스탄트 도시계획가인 르메트르의 『수도론』⁸⁾을 인용하면서 주권/사법 권력의 탄생을 영토-신체의 모습에서 보고 있다. 국가유기체론은 12세기 존 솔즈베리(John of Salisbury)의 『폴리크라티쿠스』 이래로 중세 유럽사회에 유행했는데, 르메트르는 『수도론』에서 국가유기체론에 15~16세기 영토 개념을 결합시켰다. 푸코는 15세기 이탈리아 건축가 마르티니의 그림(<그림 1>⁹⁾을 인용하면서 르메트르의 수도론을 설명한다(STP: 35~42). 르메트르는 영토화(territorialization)와 영토국가의 문제의식에서 수도(首都) 문제에 천착했다. 그의 이상은 주권의 정치적 효율성을 공간의 분배와 연결시키는 것이었다. 때문에 통치자의 거처인 수도는 가장 중요한 장소로 인지되었다. 르메트르에게 수도는 영토의 기하학적 중심인 동시에 미학적인 상징이었다. 또한

<그림 1> Martini(1470), Illustration from <the Trattato di architettura> (source: Biblioteca Nazionale, Turin 소장)



8) Le Maître, Alexandre(1973), STP(33~39)에서 재인용.

9) Web Gallery of Art(<http://www.wga.hu/frames-e.html?/html/f/francesco/5other/3tratta3.html>), 최종접속 2013년 4월 22일.

풍속의 모범이고, 진리의 생산지이며, 경제적 순환의 중심이었다. 따라서 수도에 대한 국가적 투자는 중요했으며, 수도와 영토 내 다른 지역과의 순환은 필수적이었다.

이처럼 주권/사법 권력의 지리는 통치자의 관념과 명령이 순환하는 일사불란한 영토이다. 중세의 영토가 불분명한 경계, 복수의 명령체계를 가지고 있던 것과는 상반된다.¹⁰⁾ 면(面)과 면이 경계로 구획되는 영토화는 기본적으로 우리와 그들, 안과 밖, 여기와 저기를 이항 분할한다. 영토에는 배제와 포함의 이분법이 내재되어 있다(Paasi, 1996: 14). 푸코가 영토국가의 사법장치에 나병 모델을 대입시킨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법장치는 나병 환자와 아닌 자로 구분해서 나병환자를 추방했다(STP: 29; 푸코, 2004: 41~47). 우리와 그들(나병 환자)을 구분해 영토에서 배제하는 전형적인 영토 논리였다. 푸코가 말하는 “죽게 만들고(faire mourir) 살게 내버려두는(laisser vivre) 권리”(푸코, 1998: 278~279), 즉 군주의 생사여탈권은 타자화와 배제라는 측면에서 볼 때 나병 환자 모델과 동치이다. 이항분할인 동시에 비대칭적이다. 죽게 만드는 권리와 살게 내버려두는 권리는 균형을 이룰 수 없다. 죽이지만 살리지는 않는다. 영토적 배제와 포함의 논리 역시 추방하거나 내버려두는 것이다. 그것이 영토에 체화된 주권 권력의 논리이다.

10) 중세의 영토는 권력의 중복 혹은 중첩을 특징으로 한다. 두 가지 의미에서 권력은 중복되었다. 중세 유럽사회가 기독교 지배의 영토였다는 사실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신의 권력은 절대적이었고 이 권력에서 예외는 없었다. 그러나 신의 권력은 인간 세상에서 둘로 나뉘어 있었다. 이른바 ‘양검론’의 관점인데, 도덕과 신앙을 지배하는 교황의 권력과 그 외 세속사를 지배하는 황제의 권력 두 가지가 공존한다는 견해이다(이용희, 1962: 104). 한편 세속의 정치에서도 국왕 혹은 영주의 가신(家臣)들이 권력을 분점하면서 권력의 영토는 더욱 복잡한 중첩의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황영주, 2007: 182). 그들의 이해관계는 중앙보다 공동체에 맞춰져 있었고, 그곳의 지도자 행세를 하기도 했다(같은 책). 특히 이들은 복수(複數)의 봉주와 계약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아 세속권력의 중첩과 중복을 낳는 원인이었다. 이상의 두 가지 중세 권력의 특징은 영토에 대한 권력의 배타성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었다.

3) 유럽의 균형과 외교-군사적 장치

영토국가의 출현은 제국의 붕괴, 복수(複數) 국가의 공존을 의미한다. 중세 영토에서 보였던 권력의 중첩이나 배태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영토국가는 그 영토 내에 단일하고 배타적인 주권권력을 가진다. 여기서 국가 간 관계가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영토국가는 중첩될 수 없다. 베스트팔렌 조약 이전 30년 전쟁의 후반부는 중첩될 수 없는 주권 권력 간의 충돌이었다. 그것도 다(多) 대 다(多)의 전쟁 말이다. 따라서 베스트팔렌 조약은 당사자 국가 모두가 주체인 다자간 조약이었다. 그리고 영토국가의 공존과 평화를 제도화하는 조약이었다. 푸코는 이 상태를 ‘유럽의 평형’ 혹은 ‘유럽의 균형’이라 부른다. 이 균형은 미동 없는 정적인 상태가 아니었다. 균형은 국가 간 경쟁과 견제를 통해 유지되었다. 각 국가는 경쟁 속에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도구를 갖추어야 했다.

푸코가 발견한 도구는 네 가지인데, 그 첫 번째가 새로운 전쟁 형식이었다. 영토국가 이전 중세의 전쟁은 제국 내 사법적인 행동이었다(STP: 410). 전쟁의 승패는 신탁(神卓)과 같았고, 패자의 사법권리를 박탈하면 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전쟁의 형식은 국가 간 전쟁이었다. 이것은 사법권리 바깥의 외교적 문제였다. 전쟁은 유럽균형 명목의 정치적 문제였고, 국가들은 전쟁의 타산(打算)을 따졌다. 이런 관계를 배경으로 두 번째 도구, 외교적 수단이 등장했다. 다자 간 관계는 국제 관계의 관념으로 정착했다. 특별한 사건이 없을 때에도 일상적인 정보수집과 협상이 필요하게 되었다. 외교 행위가 이전까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상시적인 조직과 일상적인 실천으로서 외교가 등장했다(STP: 414). 세 번째 도구는 상시적인 군사장치이다(STP: 418). 이 군사장치에는 직업군인과 징병제, 요새와 수송장비, 전쟁 지식까지 망라되었다. 역설적이지만 유럽의 균형은 각 국가에 상시적인 군사장치를 설치하게 했다. 푸코는 이상의 세 가지를 외교-군사적 장치로 범주화했다. 그러나 외교-군사적 장치는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없고, 이를 지탱할 내부적인 도구가 필요했다. 국가 간 관

계에서 다른 주권들에 제약받는 통치자가, 신민을 통치하는 장에서는 무한한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 소위 내치(內治, police)로 불리는 통치 실천이다(푸코, 2012: 27~29).

4. 내치, 영토의 도시화를 꾀하다: 규율장치의 이상

1) 국가이성의 발명

푸코가 개념화한 내치는 17~18세기 말 폴리스(police)라 불리던 것을 말한다. 이는 19세기 이후 우리가 경찰이라 부르는 제도와는 다른 종류다. 푸코에 따르면 폴리스는 15~16세기에도 빈번히 발견되는 단어인데, 당시에는 “공적 권위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공동체나 단체의 형식”(STP: 422)으로 공적 권위가 행사되는—국가, 도시 등의—인간사회를 뜻했다. 이런 용례는 대체로 17세기 초까지 이어지지만 17세기 중반(베스트팔렌 조약) 이후에는 “적절한 국가질서를 유지하면서 국력을 증강할 수 있는 수단들의 총체”(STP: 423)로 쓰임새가 바뀌었다. 일차적으로 국력이 문제였다. 17세기 국가 간 경쟁 공간이 형성되면서 국력 증강은 최우선의 과업이 되었다. 푸코는 국력 증강을 위해 각 국가는 적절한 내치를 확충해야 했다고 분석한다(STP: 427).¹¹⁾ 그러나 내치가 외교/군사의 도구로 고안

11) 푸코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를 하나 던진다. 그렇다면 국력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분명 국력은 비교의 준거가 필요했다. 자국의 국력은 물론 경쟁상대가 되는 타 국가의 국력도 측정해야 했다. 측정의 문제, 기준의 문제가 생긴 것이다. 즉, 유럽의 평형과 내치에 필요했던 공통의 도구, 통계학이다(STP: 428). 통계학(statistics)이 문자 그대로 국가에 대한 학문인 것은 이러한 발생의 조건 때문이다. 당시에 경쟁을 위해 알아야 했던 대상은 인구, 군대, 천연자원, 생산, 통상, 통화 순환 등이었다. 이 요소들은 통계학이라는 학문 혹은 그 인식의 영역을 통해 실제로 부여된 것이며, 통계학은 이러한 현실적인 조건에 부응해 발전하기 시작한다(같은 책). 푸코는 통계학의 성립과 발전의 군사·외교장치와 내치를 근본적으로 이어주는 교량으로 이해한다.

된 것은 아니었다. 내치에는 고유의 기원이 있었다. 푸코는 중세권력에는 있으나 사법/주권 권력에는 결여된 것, 그리고 그 결핍의 보충에서 내치의 기원을 찾았다. 그가 주목한 것은 17세기 중엽 유럽에 유행했던 국가이성 논의였다.

주권권력이 기독교 사목권력¹²⁾에서 벗어나면서 주권자에게는 일종의 결핍이 생겼다. 푸코는 그 결핍을 통치 이성, 혹은 통치 합리성으로 규정했다(STP: 327~328). ‘구원을 향한—완전한—목적론적 세계, 경이로운 기호로 충만한 세계, 유비와 암호로 가득 찬 세계’가 기독교적 사목권력의 뚜렷한 형식이었다(STP: 326). 여기서 인간과 자연에 대한 신의 통치는 완전했다. 그런데 중세의 해체는 신을 끌어 내렸고, 사목권력이 통치하던 자연과 인간은 각기 다른 원리의 영역으로 이행했다. 먼저 자연은 신의 영역에서 벗어나, 이른바 자연 원리(*principia naturae*)가 지배하는 대상으로 변화했다. 그러나 인간을 통치하는 주권에는 ‘원리’에 해당하는 이성의 자리가 비어 있었다. 푸코가 주목한 보충물은 라티오 스타투스(*ratio status*), 즉 국가이성(*raison d’État*)이었다(STP: 328). 국가이성은 자연과학의 원리에 해당하는 지적 발명이었다. 자연과학이 자연만을 참조하듯, 국가이성이

12) 푸코는 1978년 2월 8일, 『안전, 영토, 인구』 5강부터 사목권력을 다루기 시작했다. 그리고 9강에서 국가이성을 사목권력을 부분적으로 대체·보완하는 관념으로 설명한다. 1강부터 4강까지 통치성과 세 가지 장치를 개괄한 후 내치를 다루기 전까지 거의 다섯 강좌를 사목권력에 할애한다. 그 이유는 4강 말미에 이렇게 밝히고 있다. “[그리스도교적] 사목제도, 새로운 외교적·군사적 기술, 마지막으로 내치, 저는 바로 이 세 가지야말로 서구의 역사에서 국가의 통치화라는 근본적인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게 되었던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STP: 165). 푸코는 사목권력을 그리스의 도시국가에 비교하며 인구에 대한 통치를 강조한다. 즉, 그리스의 신은 도시의 신이었지만, 기독교의 신은 양떼를 이끄는 신이라 말한다(STP: 183~184). 목자가 양떼를 이끌듯, 배려하고 헌신하는 권력으로 그려진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양떼라는 전체와 양 한 마리로서 개체를 등치시키고 양자 모두를 목표로 한다는 점이다(STP: 190). 기독교 교리에서 개인의 모든 것을 알고 관장하는 신, 그것이 사목권력의 목자이다. 그리고 푸코가 지적하듯이 서유럽인들은 ‘자기 자신을 양떼 속의 한 마리 양으로 여기는 법’을 천 년 이상 배워왔고(STP: 191), 이것이 후일 안전장치와 자유주의 통치성 정착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가만을 참조하는 것은 순리였다.

사목합리성과 국가이성의 대비, 국가이성의 발명에 대한 인식은 국가를 하나의 특수한 역사적 이념형에 위치시킨다. 이는 고대-중세-근대의 국가를 나누어 보는 단계론적 사고가 아니라, —푸코의 견해대로라면— 16세기부터 17세기 **사이**의 형성된 통치실천을 인식하도록 고안된 도식이다. 푸코는 국가를 사목합리성에 대비되는 통치 합리성(ratio gubernatorial)의 한 형태로 봤다. 그에게 국가는 국가이성을 원리로 하는 당대의 통치 실천들이 빚어낸 “돌발사건”(STP: 346)이었다. 사법, 재정, 군사 등 국가가 필요로 하는 제도들은 17세기 이전에도 존재했다. 그러나 국가가 인간의 인식과 실천에 확실히 개입하는 순간은, 푸코가 “품행상의 봉기”(STP: 313)라고 표현했던 순간은 국가이성과 함께 찾아왔다. 기독교 천년왕국을 지배했던 사목권력과 사목합리성이 그 절반은 자연과학에 내어주고, 나머지 인간에 대한 통치의 몫을 국가에 이전했다는 것이 푸코의 핵심적인 주장이다. 이처럼 푸코는 국가와 통치의 관계를 뒤집는다. 국가가 있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가 있어 국가가 등장한 것이다. 그의 관점에서 국가는 통치 합리성이 —당대 통치술을 활용해— 지휘하는 통치실천의 결과이자 목적이었다. 여기서 17세기에 ‘돌발사건’을 일으킨 통치실천이 내치이고, 그 통치 합리성이 중상주의였다.

2) 도시, 기술과 계산의 공간

중상주의는 ‘유럽의 평형’에서 출발했다. 푸코는 이 중상주의를 국력 증강을 위해 유럽 국가들이 사용한 ‘기술과 계산’으로 설명한다(STP: 455). 이 계산법에서 경쟁을 이겨내기 위한 근본적인 무기는 통상이다. 국가 간 제로섬 게임에서 금의 수입을 늘리기 위한 방법은 값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가격경쟁력에 있다. 값싼 노동력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인구를 가져야 하고, 그들에게 지급할 임금 수준은 낮아야 한다. 낮은 임금수준을 위해 생활필수품, 특히 곡물가격에 대한 가격통제는 필수

적이다. 그리고 이상의 증상주의적 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지리적 토대가 시장-도시였다. 푸코의 말대로 시장도시는 이 시기 이전에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 다만 증상주의에 의해 국가가 인간의 삶에 개입하는 하나의 모델로 구축(構築)된 것이다(STP: 457). **국가이성에 있어** 도시는—앞서 살펴본—안전이나 위생의 문제 공간인 동시에, 통상의 근거지로 인식되었다. 푸코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예 내치의 공간을 도시로 특정한다(STP: 455). 내치의 목적은 도시의 통제, 나아가 영토 전체의 도시화였다. 도시 문제가 당시 통치에 위기를 초래했다는 사실은 앞서 확인한 바다. 여기서 국가이성이 도시문제에 대처하는 방식이 내치였다. 즉, 내치에서는 도시가 특권화되었다. 푸코는 루이 14세 시대의 법학자인 장 도마(Jean Domat)의 『공법론(Du droit public)』(1697)을 인용해 도시와 내치의 관계를 설명한다.

국가이성에
국가이성에서
*일본어 표현

도마의 생각에서 내치와 도시의 연관관계는 매우 강합니다. 요컨대 오직 내치가 존재했기 때문에 우선 인간들이 모였고, 다음으로 넓은 의미에서 ‘교류’, 즉 공존·순환·동거·대화·매매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하는 방식을 조절할 수 있었다고, 이런 공존·순환·교류를 통제하는 내치가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도시는 존재할 수 있었다고 말할 정도로 말입니다(STP: 454).

푸코에 따르면 ‘내치화하다(policer)’와 ‘도시화하다(urbaniser)’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STP: 455). 그런데 내치화하다는 ‘문명화하다’, ‘개화하다’, ‘교화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였으니, 당대에 도시화라는 표현은 내치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화의 주체와 대상을 전제하고 있었다. 즉, 여기서 도시화란 내치의 다른 이름이며, 그 대상은 공존과 순환이었다. 그렇다면 변화 이후의 상태, 도시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인가? 내치국가는 통상을 중심으로 도시를 만들었고, 이 도시화가 내치화와 동의어라면 도시화나 내치화가 지향하는 변화 이후의 상태는 무엇인가? 그 해답은

내치국가의 권력 메커니즘, 즉 규율장치에서 찾을 수 있다.

내치의 논리는 규율과 통제였다. 또한 신민에 대한 규율과 훈육이었다. 때문에 사회에 대한 ‘가독성(readability)’¹³⁾이 중요했다. 주권/사법장치의 생사여탈권을 넘어서 신민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가 필요했고, 16세기 이래 발전하기 시작한 행정장치들은 이를 위한 도구가 되었다. 국가이성은 주권/사법의 합법성 논리에 얽매이지 않는다. 국가이성은 오직 국가만을 참조한다. 푸코가 내치를 “항구적 쿠데타”(458)로 정의하는 이유이다.¹⁴⁾ 중상주의 통치에서는—법률이 아니라—칙령에 의존하고, 신속하며, 세세한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한다(STP: 459). 예카테리나 2세의 『칙령집』이 보여주는 무제한적 통제, 항구적 통제, 끊임없이 갱신되는 통제, 점차 상세해지는 통제의 세계가 국가이성의 통치, 이른바 규율장치의 본질이다.

규율장치의 지리는 통제의 도구로서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작게는 학교, 수도원, 병원, 감옥, 공장 등에서 행해지는 규율공간, 통제공간에서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일차적으로 규율장치는—푸코의 말대로—구획과 통제의 논리를 도시공간으로 확장시킨다. 푸코는 프랑스 투렌과 푸아투 지역의 경계지대에 있는 계획도시 리슐리외의 계획을 사례로 든다(STP: 39~42). 이곳은 1631년 추기경 리슐리외가 추진해 건설한 도시이다. 고대 로마의 병영 형식을 따라 정사각형과 직사각형으로 구성

13) 가독성(可讀性)은 제임스 C. 스콧의 저서 『국가처럼 보기』(2010)에서 분석의 중심에 두는 개념이다. 그는 푸코의 내치적 관점에서 작동하는 국가 통치가 왜 실패하는지를 설명하는 방대한 작업을 진행했는데 거기서 독일관방학의 통치 실천에서 도출된 것이 사회에 대한 가독성을 높이는 작업이었다. 아프리카, 러시아 등 다양한 사례에서 근대 이전 전통 사회나 공간의 조직과 질서가 통치자의 시선에서 얼마나 무질서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는지 말한다. 그리고 국가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전통적인 지식, 조직, 공간을 어떻게 파괴했고, 이 파괴가 국가의 애초 의도를 얼마나 뒤틀리게 하는지 조명한다.

14) 푸코는 쿠데타와 혁명을 구별한다. 혁명과 달리 쿠데타는 국가 그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이성의 차원에서 보자면, ‘유럽의 균형’ 조건에서 국가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는 한, 쿠데타는 합리적일 수 있다.

된 기하학적인 도시를 창조했다. 푸코는 이 도시를 사례로 주권/사법장치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도시 내부의 구조를 다뤘다. 병영(兵營)의 논리를 도시 설계에 적용한 만큼 — 의도했건, 하지 않았건 간에 — 이 도시에 반영된 국가이성의 통제와 규율의 목표는 분명했다. ‘공간의 건축화’로 이름 붙여진 도시건설에서 규율은 건축의 질서로 반영되었다. 이와 관련해 구획된 공간 위에서 이루어지는 통치실천은 흑사병에 대처하는 방식(흑사병 모델)으로 소개되고 있다. 16~17세기까지 흑사병에 대한 통제는 도시를 격자화하는 방식이었다(STP: 29). 병사들은 구역을 나누어 가가호호 방문을 했고, 이를 통해 외출시간, 음식, 대인접촉 등을 통제했다. 또한 군대식 점호를 규율로 삼아 개개 신민의 상태를 파악하려 했다.

3) 거대한 규율의 꿈, 전 국토의 도시화

내치는 도시화를 통해 중세 말기부터 지속된 도시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듯했다. 푸코는 당시 파리를 칭송하는 여러 저작들을 소개하며, 내치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묘사한다(STP: 454). 내치에 대한 높은 자신감은 내치를 왕국 전체로 확장시키려는 기획으로 나타났다(STP: 455). 주권권력이 수도를 중심으로 영토를 조직하려 했다면, 내치국가의 규율권력은 “영토의 도시화”(STP: 454)를 꾀했다. 통치의 측면에서 보면 내치의 통치실천과 규율장치에 대한 상당한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다. 규율장치의 실천 영역을 전 영토로 확산하려는 야심찬 기획에는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다. 도로이다. 도시 내부와 외부를 빠르게 연결하는 도로망이 추진되었다(같은 책). 이는 도시(혹은 내치)를 영토 전반에 확산시키려는 동질화 기획이었다. 여기서 규율권력의 도시를 다시 생각해보자. 공장이나 학교처럼, 구획하고 통제하는 공간의 건축이 규율권력의 도시였다. 정돈된 도시 내부 지역들과 그 지역들을 잇는 직선의 가로망이 규율도시의 형태였다. 그렇다면 도시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도시 간 연결망을 확충하는 작업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푸코는 이를 “거대한 규율의

꿈”(STP: 461)이라 말한다. 영토 전체에 거대한 규율공간을 구성하려는 시도가 내치의 가장 특징적인 요소라는 것이다.

전 국토의 도시화는 영토화의 제2단계에 해당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도시화가 내치화와 동일한 의미라고 보았을 때, 전 국토의 도시화는 전 국토의 내치화와 같다. 르메트르의 수도론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어느 국가이건 처음 도시화를 집중하는 곳이 있게 마련이다. 대개의 경우 그 곳은 수도(首都)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국토의 도시화란 수도를 중심으로 명령과 통상의 순환을 구축한 후, 혹은 일정한 성과를 달성한 후에 일어난 내치의 전국화 과정이다. 이것은 마이클 만(Michael Mann)이 하부구조 권력(infrastructural power)(Mann, 1984: 188)이라 부른 현상과도 비교할 만하다. 비록 만의 관점과 문법이 푸코와는 다르지만, 18세기—기반시설을 포함한—공공재화의 공급을 “주권의 영토화”(Agnew, 2009: 117)에 연결 짓는 것은 푸코의 관찰과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효과적인 하부구조 권력은 국가의 집합적 권능을 강화시켜 아래로부터의 도전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도시(내치)를 전국화하려는 통치 실천의 합리성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요컨대 도시의 전국화는 수도 중심의 영토화라는 주권/사법장치의 지리 위에 내치를 통한 규율적 통치를 전국화하려는 기획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성패를 떠나서 이는 규율장치의 출현이 공간적 차원에서 국가를 형성해가는 주요한 작업이었으며, 국토계획이나 지역계획 등의 지식이 등장하고 활용되는 배경이 되었다.

5. 통치성의 지리 3: 새로운 통치의 등장, 안전장치

1) 자연의 귀환: 국가이성에 기입된 자유

앞서 본 주권/사법 권력에서도 규율권력에서도 순환은 최우선의 과제였다. 푸코는 밀도를 통치하는 내치의 기술들이 도시를 살아남게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내치의 한계, 중상주의의 한계는 그리 오래지 않아 드러났다. 이른바 곡물내치의 실패였다. 푸코는 18세기 초반에 발생한 식량난에 주목했다. 식량난에 대한 중상주의적 대응은 무엇인가? 푸코는 이것을 “반(反)-식량난 체계”라고 불렀다(STP: 60). 이 체계는 통제된 곡물 순환을 만들려 했다. 시장 출하 시기를 조절하고, 가격을 통제하는 것이 반-식량난 체계의 목표였다. 일어날 수도 있는(éventuel) 사건을 사전에 막기 위한 일체의 시도가 이 체계의 특징이었다. 그러나 국가는 실패했고 반-식량난 체계 역시 위기를 맞았다.

공격의 주역은 중농주의와 그들이 고안한 ‘정치경제학’이었다(STP: 462~479). 중농주의는 내버려두길 주문한다. 현재의 우리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처방이지만, 식량시장의 자연이 스스로 치유되리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인공주의에 대한 비판으로서 ‘자연’이 등장한 것이다. 푸코는 정치경제학에 의해 시장 혹은 사회가—국가이성이 아니라 자연과학의 대상으로서—자연이 되었다고 말한다. “18세기에 탄생한 새로운 형태의 통치성이 국가에 필요한 상관물로서 출현시킨 것”이 (시민) 사회라는 것이다(STP: 474). 국가이성 혹은 중상주의 통치성은 자연이 아니라 규범의 문제였다. 도시에 대한 내치도 규율의 문제였다. 그런데 자연으로 보는 순간—신의 합리에서 국가이성이 분리되면서 자연과학에 넘겨졌던—다른 방식의 합리성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것이 ‘통치 외부에 존재하는 과학’이었고, 경제학은 그 위치에 만들어졌다. 자연을 구성하는 자유로운 개인, 호모 에코노미쿠스도 필요했다. 국가이성의 통치에서 부당한 권력 사용에 대립향이었던, 때문에 국가이성의 외부에 존재했던, 자유는 시장자유와 같은 형식으로 국가이성 내부에 기입되었다(STP: 478).

푸코는 새로운 통치 합리성이 요구하는 국가개입의 요체를 자연에서 찾았다. 훈육하거나 처벌하는 방식이 아니라 나뭇의 자연을 유지하며 일탈하지 않게 하는 것, 바로 안전장치(dispositif de sécurité)였다. 여기서 통치성의 근본 목표이자 전략적인 도식으로서 국가는 시장과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일련의 실천들로 구성되었다. 이는 사법장치처럼 생명을 배제

하는 것도 아니고, 규율장치처럼 모든 개인을 통제하는 것도 아니다. “무질서의 배제”라 말한다(STP: 479). 내치는 — 지금의 의미에서 — 경찰로 최소화된다. 이런 권력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자연에 대한 앎이 필요했다. 시장을 포함해 사회로 불리기 시작한 자연에 대한 앎은 자연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조건이었다. 그리고 국가는 그 앎을 통해 계산했다. 규율권력의 계산이 복종하는 신민을 상정한 단순한 계산이었다면, 안전장치는 자연에 대한 앎을 통해 점차 복잡한 계산식을 풀어갔다.

2) 인구: 통계학적 예측의 대상

그중 가장 중요한 앎은 인구(population)에 대한 것이었다. 푸코는 인구의 개념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추적하면서 18세기에 발생한 단절을 설명한다(STP: 105~129; 475~479). 지금 개념에서 인구의 증감을 의미하거나, 중상주의에서 복종적인 노동인구로만 정의되었던 인구가 경제적 이성에 이르러 자연으로 인식되었다. 인구를 자연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 일단 인구에 내재한 법칙이 있다는 의미이다. 인구의 증감, 이동에는 나름의 법칙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게 되었다. 인구를 복종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계산하고 분석할 대상으로 인지하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에는 당대에 발전하던 두 가지 학문적 성취가 크게 기여했다. 바로 통계학과 생물학이다.

통계적 도구들은 내치국가에서부터 발전했다. 독일 관방학에서 통계는 가독성 차원의 지식이었다. 때문에 단순화와 추상화가 최우선의 덕목이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신민의 수는 몇인지 측정하고 목록화하는 작업이 주된 과업이었다. 당시 인구 개념에서는 그 정도면 족했을 것이다. 신민은 따라야 하는 복종적인 존재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전장치에서 통계학은 전혀 다른 도구로 쓰였다. 푸코는 우두접종을 나병 모델, 페스트 모델과 비교하며 안전장치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우두 모델의 차별적 지위는 통계에서 기인했다(STP: 92~101). 우선 천연두-우두 모

델에서는 사법장치의 공간적 구획이 사라졌다. 대신 천연두로 사망할 확률, 예방접종으로 치료될 확률이 관심사가 되었다. 연령별, 직업별, 공동체별 위험도와 정상범위를 통계적으로 계산했다. 국가개입은 자연성 외부의 요인에 의해 주로 발생하는 폭주와 비정상이 관측될 때, 무질서를 배제하는 선에서만 이루어졌다. 여기서 사례, 확률, 분포, 정상성 등 통계적 도구들은 인구의 자연을 이해하는 통치 이성의 눈이었다.

안전장치의 앞에 또 다른 요소는 생물학적 성취와 관계되어 있다. 인구에 대응하는 무엇, 인구를 둘러싸고 있으며 인구와 영향을 주고받는 무엇, 바로 환경(milieu)이다. 푸코는 뉴턴의 고전역학에서 발생해 라마르크의 생물학에서 한층 발전한 환경 개념을 소개한다(STP: 48~53). 환경은 역시 순환의 문제였다. 환경과 인구는 인과(因果)로 묶여 있다. 생물학적인 개념에서 보면 환경과 인구는 서식지와 개체군의 문제이다. 개체군은 터하고 있는 서식지에 영향을 받고 서식지에 다시 영향을 준다. 안전장치가 서식지, 즉 도시를 정비하는 이유이다. 그리고 도시정비는 인구를 목표로 하는 통치실천인 것이다.

3) 환경으로서 도시정비

푸코는 환경으로서 도시정비를 피에르 르리에브르(Pierre Lelièvre)의 18세기 낭트 연구(L'Urbanisme et l'Architecture à Nantes au 18ème siècle, 1942)에서 찾고 있다(STP: 43~45). 낭트의 도시 정비는 순환을 관리할 도시 기능 확충을 목표로 했다. 위생, 환기, 교역, 감시 등 나쁜 순환을 제거하고 좋은 순환을 증진시키는 일련의 정비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규율권력의 경우처럼 건축적인 완벽성을 추구하지 않았다. 다만 정상성을 유지하는 한에서 관리하는 문제였다. 푸코는 안전장치의 도시정비를 “정확히 통제되지도 않고 통제할 수도 없으며, 정확히 계측되지도 않고 계측할 수도 없는 미래”를 위해 “발생가능한 비”를 고려하는 것이라 정의한다(STP: 47). 때문에 일시에 완벽을 기할 수 없는 과업이고, 유동적인 요소, 발생할 사

진, 축적되는 저량(stock)의 무한한 계열이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안전장치의 지리에서 도시가 특권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졌다. 중상주의 통치성에서는 상업과 교역을 강조한 만큼, 도시적 내치를 영토 전반에 관철시키려 했던 만큼 도시가 특권적이었다. 반면 안전장치, 특히 중농주의적 시각에서 농촌(대지)은 생산의 공간으로 중시되었다. 이는 상품화의 문제를 대신해 생산의 문제가 중요해지면서 생겨난 변화였다(STP: 464). 그러나 안전장치의 공간이 농촌이라 할 수는 없다. 생산이 중요해지는 바람에 국가이성에서 소홀했던 농촌(대지)이 부각되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18세기 유럽의 지리적 특수성이다. 오히려 안전장치의 지리에 들어서는 일반적 맥락에서 다양한 인구의 가능성, 즉 농업인구나 상업인구와 같은 여러 범주의 인구와 이들의 터전으로서 환경의 무한계열(요소, 사건, 저량)에 대한 인식론적 전환이 중요한 발견이다. 무한계열의 가능성은 정비와 관리 대상으로서 보다 추상화된 환경(milieu)과의 관계를 통해 안전장치의 공간을 생성했다.

6. 결론을 대신하여: 한국의 정치지리와 통치성

푸코는 통치의 렌즈로 서구 유럽의 근대국가 형성을 해부했다. 그리고 이 글에서는 푸코가 밝혀낸 서구 통치의 역사에서 생성된 공간들을 **통치술의 발명**.

문장이 완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확인해 주십시오.

푸코의 접근은 도시, 국가를 주어진 실재로 전제하고 근대적 기원을 탐문하던 방식에 비해 국가와 도시의 근대를 유연하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테면 근대적 도시계획의 기원에 대한 그간의 논의가 사건과 인물을 특정해야 했고, 그 탓에 자의적인 의미부여를 피하기 어려웠다고 보면, 일련의 사건을 통치의 변곡점에 위치시키고 거기에 등장한 지식과 기술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방식은 주관적 비약의 위험을 크게 낮춘다.

그러나 분명히 그의 통치 연구는 서유럽의 역사에 대한 계보학적 분석이다. 즉, 절차적 이론이라기보다는 실체적 이론에 가깝다. 그가 강의에서 밝히고 있는 국가의 기원과 도시와의 연관은 지리적 보편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푸코의 통치성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 계보학으로 불리는 권력 탐구의 방법론을 논외로 하더라도 — 그가 밝힌 서구의 통치술이 지난 한 세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주권국가의 국제적 질서에 편입하고, 중상주의적 통치실천을 압축적으로 경험하기도 했으며, 신자유주의의 세계적 범람에서도 무관할 수 없었다. 때문에 푸코의 권력론과 통치 연구는 권력이라는 보편적 현상에 대한, 공간 조형의 정치적 논리에 대한 인식론과 연구프로그램으로서 명백한 특장(特長)을 가진다.

그러나 국가마다 통치실천의 형태는 다를 수 있다는 푸코의 지적은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간에도 내치의 단계에서 드러난 편차가 컸다는 점은 앞서도 언급했던 대로이고, 이는 장치 각각의 형태와 장치 간 결합이 특정한 역사적 조건과 국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비서구 맥락에서 통치실천을 논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실제로 푸코는 서구 이외의 경험에 대해서 논한 바가 없다. 그의 응답은 전적으로 지난 수백 년간 서구에서 일어난 권력의 계보학에 국한되어 있다. 동아시아 국가, 특히 한국의 경우엔 어떤 변이를 생각해야 하는가?

어느 서구 이론이나 마찬가지로겠지만 동아시아와 탈식민, 분단과 냉전의 층위가 중첩되어 있는 한국의 조건은 간단히 재단하기 어렵다. 푸코의 권력론에서 지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나 지식의 전래만으로 통치가 보증되지는 않으며(cf. Sonn and Gimm, 2013), 지식의 대상이 전혀 다른 문명이었다면 양자 간의 충돌과 불협화음은 피하기 어렵다(김용구, 2007: 67). 특히 주권/사법장치의 충격은 중화(中華)의 질서 아래 있던 조선에 매우 크게 다가왔다.

1) 국가(國家)와 국가(state)의 충돌

앞서 우리는 국가(state)를 통치실천의 와중에 발생한 일대 사건으로 묘사한 푸코의 논리를 따라가 보았다. 푸코는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해 영토 국가가 제도화되었다고 했으나, 문자 그대로 안정 상태를 의미하는 국가가 성립하기까지는 국민국가의 힘을 상징했던 나폴레옹의 정복전쟁, 그리고 그 과정에 유럽전역으로 확산된 국민(민족)주의, 나폴레옹 이후 메테르니히가 주도했던 비엔나 협약 등 또 다른 세기의 시간이 필요했다. 그만큼 서구에서 국가는 격렬한 시간을 거치며 제국적 질서, 종교적 질서의 대안으로 안정화되어간다. 반면 한국의 국가(國家)는 신라시대 처음 사용되어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큰 도전을 받은 적이 없다. 이는 중국 대륙이 진나라에 의해 통일된 이후 내외를 가르는 국가(國家)보다 모든 것을 아우르는 천하(天下) 개념을 강화시켜나간 것과는 대비된다(cf. 김성배, 2012). 박상섭(2008: 108~109)은 조선왕조실록을 토대로 당시 지배층이 조선조 이전의 왕조에 대해서도 하나의 국가(國家)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여기서 국가는 중국에 대한 사대관계 아래에 놓여 있다고 분석한다. 중국에서 천하 일가(天下一家)를 군림하는 황제의 제후에 대해 국가(國家)라 지칭했다는 점을 고려하면(같은 책; 김성배, 2012: 10), 중화질서 아래에서 국가의 지위가 꽤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근대적 의미의 동질적인 영토는 아니지만, 일정한 변경을 중국과 공유하는 선에서 영토 자체의 안정성도 보장받을 수 있었다(이진경, 2010: 238~239).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개항기 서구적 만국공법(萬國公法)이 가져왔을 충격을 가늠하게 해준다. 당연하게 여기던 중화와 국가(國家)의 관계를 청국(淸國)과 아국(我國), 국가(state)와 국가(state) 간 관계로 인식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이는 중화라는 우산이 사라지고 국가 간 경쟁의 장에 노출된다는 의미였고, 결국 부국강병(富國強兵)의 길을 모색하지 않으면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상황을 말했다. 1897년 대한제국 선포는 이런 격변의 시기를 헤쳐 나갈 유일한 방안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청의 사신이 묵던 숙소 남별궁 자리에 원구단을 올리고, 청의 사신이 지나던 영은문을 허물고 독립문을 세운 것은 조공정치의 청산과 공법적 질서로의 편입을 선언하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2) 주권/사법장치와 영토국가의 문제

첫 번째 문제는 대한제국을 통해 선언적으로 등장한 주권/사법장치에 관한 것이다. 서구에서 주권 담론은 도시중심의 중세적 질서를 국가와 영토로 통합하는 주요한 지식이었다. 중앙집권적 권력형태를 갖추고 대외적인 간섭에서 독립하는 것이 주권/사법장치의 요체라면,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주권이론에 대한 지식 축적이었다. 그러나 조선의 경우 이미 오랫동안 중앙집권적인 체제를 중화사상 속에서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권력에 대한 정당화 논리를 애써 개발할 필요가 없었다(박상섭, 2008: 237). 헨리 휘튼(Henry Wheaton)의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1836)를 한역(漢譯)한 『만국공법』이 전해진 후, 유길준의 양절체제론에 이르러서야 주권 개념을 통한 정당화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따라서 대한제국은 이미 수백 년을 지탱해온 영토 기반 위에 주권 개념과 그것과 연결된 서구적 통치술을 도입한 셈이다. 여기서 서구의 영토국가로 대변되는 주권/사법장치의 형성과정과 근본적인 차이를 빚게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진경(2010: 238~241)은 개화기 이후 근대적 영토성의 성립과정을 당시 신문에 나타난 영토관을 통해 기술한다. 영토, 강토, 삼천리 등의 주요어가 《독립신문》과 《대한매일신보》에서 어떤 문맥에 위치하는지 검토하는 방식을 취했다. 다분히 선구적인 연구이지만 그의 해석에는 논쟁의 여지가 많다. 그가 말하듯이 개화기 이전과 이후의 영토성은 다르다. 대한제국 이후의 영토성에 서구적 영토의 통치술이 강하게 드러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조선조의 영토성을 근대 이전의 서구 영토성에 비유하며 동일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의 주된 논거는 개화기 이후가 되어서야 국민 만들기가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구적 경험에서도 주권/사법 권력의 영토국가는 민족주의와 상당한 시차를 가진다. 이 글에서 주로 살펴본 푸코의 통치성 논의는 물론이고, 제습의 국가론이나, 최신 판본의 신베버주의 국가론에서도 국가를 일피암적으로(monolithic) 설명하지 않는다. 때문에 영토성과 민족주의를 규범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중화질서와의 관계가 조건짓는 영토의 안정성에 대해, 그리고 이 영토성이 서구의 영토 통치를 만났을 때 어떤 화학반응을 일으키는지에 대해 더 세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3) 분단과 냉전체제: 국가관 관계의 복잡성

군사외교적 장치와 내치의 긴장이 내치의 다양한 변이를 가져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푸코 스스로도 언급한 바 있다. 내치의 장에서 주권자가 추구하는 무한한 목표는 국가 간 관계의 유한한 목표에 연결된다(푸코, 2012: 27~29). 그런데 푸코가 내치와 군사-외교장치의 긴장을 발견한 시기, 즉 베스트팔렌 조약을 전후한 17세기 중반, ‘유럽의 균형’은 평면적이고 동질적인 국가 간 관계를 상징했다. 그리고 이 균형은 그 후 전 세계적으로 제국주의적 팽창을 벌인 열강의 균형이었다. 그러나 냉전체제의 등장과 한반도의 분단은 한국의 외교-군사적 장치를 ‘유럽의 균형’과는 다른 상황에서 전개시킨다.

먼저 한반도의 분단은 한국 고유의 외교-군사적 지형을 형성했다. 두 개의 국가가 적대적으로 공존한다. 양자 모두 각각의 주권/사법장치를 영토 내에 실현하고 있는 영토국가이다. 그러나 양국의 헌법에는 통일에 대한 전망이 명문화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 헌법 3조에 그 영토를 북한을 ‘한반도’라 명시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 1972년까지 헌법상 수도를 서울로 명기했다. 일촉즉발의 위기는 늘 존재했고 이는 양국의 통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일례로 1970년대 중반 수도이전백지계획이 작성된 배경에는 북한의 안보위협이 있었다(주성용, 2006: 242). 당시 도시계획 실

무를 담당했던 연구자는 한남대교 도로 폭을 결정하는 데에도 북한 교량과의 비교와 경쟁이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회고한다(손정목, 2003: 75).

이처럼 분단은 그 자체로 외교군사장치의 중요한 축이지만, 미소 냉전 체제에 연결되면서 더욱 복잡한 지형을 형성했다. 냉전은 미국과 소련, 두 극을 중심으로 한 위계적 국가질서를 만든다. 남한과 북한은 양 진영이 물리적으로 대립하는 경계부에 위치해, 냉전의 위계에 더욱 깊숙이 편입되었다. 미국과 소련은 각각 남한과 북한의 통치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 여전히 주권/사법장치의 예외적 공간으로 남아 있는 미군기지는 매우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사례일 뿐, 한국사회에 대한 미국의 영향은 전방위적이었고, 냉전의 종식 이후 한국 내에 지구적 생산네트워크(GPN: Global Production Network)의 형성과정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Glassmann, 2011). 이런 이유에서 분단과 냉전, 이 두 요소가 형성하는 외교-군사적 지형을 내치의 역사와 연결 짓는 일은 내치의 경험을 밝히기 위해 중요한 작업이며, 나아가 안전장치와 결합한 내치의 공간을 이해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4) 요약 및 결론

지금까지 서구와 다른 측면에서 세심히 고려할 사항에 대해 한국의 정치지리적 특성 위에서 살펴보았다. 핵심적인 내용은 대개 주권/사법장치와 군사외교적 차원에 국한된 것으로 보인다. 개항 이전과 이후의 시간적 단절, 서구와 동아시아의 지리적 단절이 영토와 국가 간 관계에 이르러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통치성의 장치들 각각이 유사해 보일지라도 장치 간에 어떤 결합의 형태를 가지느냐는 전체적인 통치 형태 자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를 비교하며 내치의 변이와 차이를 논한 푸코의 지적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상술하지 못했지만, 유럽적 사목권력 논리 역시 한국의 맥락에서는 문제시할 여지가 충분하다. 특히 이것

은 안전장치와 연결되는 중요한 논리적 고리이기 때문에, 사목권력의 위치가 비어 있는 한국, 나아가 동아시아의 통치성은 유럽의 그것과 다른 요인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서구 국가의 계보학에서 통치성의 지리는 통치성 그 자체의 성립과 유지에 중요한 차원이었다. 통치의 현장 혹은 맥락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가 아니라 공간을 다루는 지식과 실천이 통치 자체를 조건 짓는 요소였기 때문이다. 푸코의 관점에 서서 보면 국가 통치성은 공간적 차원의 역사적 자료를 효과적으로 소환할 수 있는 프레임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리학적 독해가 용이한 개념일수록 다른 맥락에 적용할 때 더 유의해야 한다. 변이를 일으킬 요인이 다양한 만큼 공유하는 것과 공유하지 않는 것의 구분이 명확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 경험에서의 통치실천이 무엇인지, 통치를 합리화했던 지식과 권력의 공모는 어떠한지는—서구 개념의—적용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들이다.

물론 이 글에서 통치성에 관련된 한국적 정치지리를 포괄적으로 다루려 했던 것은 아니고, 그럴 수도 없는 일이다. 한 연구자가 하나의 논문으로 푸코의 통치성 같은 거대한 사유를 평가하고 체계적인 과제를 제시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 글은 푸코 통치성 논의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서구적 경험의 판본을 확인하는 작업인 동시에, 한국의 역사적 공간을 정치적 논리에서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적 가능성을 탐색하는 차원에서 기획되었다. 따라서 이 글이 향후 공동의 논쟁과 연구를 위한 하나의 문제제기로 받아들여지길 바라며, 역사의 구체적 장면에서 어떤 장치가 등장했는지는 차후에 소상히 밝혀져야 할 과제로 남겨두겠다.

❖ Abstract

Rethinking the geography of governmentality
on the South Korean context

Gimm, Dong-Wan

Why have states governed cities? How have states been shaped through governing practices. This article began with this question and tried to rethink Foucault's literature on the governmentality. The focus is the invention of governing technologies for dealing with urban problems in western Europe since late medieval age. The main text is Foucault's lecture [Security, Territory, Population]. This study attempts to highlight the importance of urban problems by which governmentalities are urged to be varied and changed. By providing recent achievements of the human geography field, the possibility of variegated governmentalities are, at least theoretically, justified. Furthermore Foucault's historical evidences could give a useful way to develop his frame in the context of Korea if two preconditions can be satisfied: 1) elucidation on the features originated with the colonial experience, 2) consideration on geopolitical singularities of divided states.

Keywords: Foucault, governmentality, territorialization, urbanization, urban planning.

참고문헌

- 기로워드, 마크(Girouard, Mark). 2009. 『도시와 인간』. 민유기 옮김. 서울: 책과함께.
- 김범수. 2006. 「중세 주권 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6년 6월, 578~595쪽.
- 김병용. 2011. 「서양 중세 도시 성곽 축조와 유지에 관한 소고」. 《역사와 담론》, 59, 189~216쪽.
- 김성배. 2012. 「한국의 근대국가 개념 형성사 연구 — 개화기를 중심으로」. 《國際政治論叢》, 52(2), 7~35쪽.
- 김용구. 2007. 『세계관 충돌과 한말 외교사』. 서울: 문학과지성사.
- 김준석. 2012. 「17세기 중반 유럽 국제관계의 변화에 관한 연구」. 《國際政治論叢》, 52(3), 111~139쪽.
- 다카시, 사카이. 『통치성과 자유』. 서울: 그린비.
- 도승연. 2009. 「여성이 행복한 도시가 가지는 반여성적 장치와 효과들」. 《사회와 철학》, 18, 251~290쪽.
- 박상섭. 2004. 「근대 주권 개념의 발전과정」. 《세계정치》, 25(1), 95~123쪽.
- _____. 2008. 『국가·주권』. 서울: 소화.
- 박주형. 2013. 「서울의 공간과 정책 ; 도구화되는 ‘공동체’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비판적 고찰」. 《공간과 사회》, 43, 5~43쪽.
- 서동진. 2009. 『자유 의지 자기계발의 의지』. 파주: 돌베개.
- 손정목. 2003.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 3』. 서울: 한울.
- 스콧, 제임스 C.(Scott, James C.). 2010. 『국가처럼보기』. 전상인 옮김. 서울: 에코리브르.
- 앤더슨, 페리(Perry, Anderson). 1996. 『절대주의 국가의 역사』. 구학서·김원중·박순준·박경옥·이학수 옮김. 서울: 소나무.
- 이용희. 1962. 『一般 國際政治學』. 서울: 박영사.
- 이정희. 2011. 「미셸 푸코의 통치성의 계보학: ‘국가 이성’을 중심으로」. 《시대와 철학》, 22(1), 55~88쪽.
- 이진경. 2010. 『역사의 공간: 소수성, 타자성, 외부성의 사건적 사유』. 서울: 휴머니스트.
- 이희영. 2010. 「섹슈얼리티와 신자유주의적 주체화」. 《사회와 역사》, 86, 181~219쪽.
- 임동근. 2010. 「한국의 도시지식체계의 형성과정과 연구기관의 발전방향」. 《인천학 연구》, 12, 103~135쪽.
- _____. 2012. 「‘인간’과 장치」. 《문화과학》, 71, 285~299쪽.
- 주성용. 2006. 「한국의 신행정도시 계획안에 관한 연구」. 《연세학술논문집》, 43, 238~259쪽.
- 진태원. 2012. 「푸코와 민주주의: 바깥의 정치. 신자유주의. 대항품행」. 《철학논집》, 29, 153~188쪽.

- 푸코, 미셸(Foucault, Michel). 1994. 오생근 옮김. 『감시와 처벌: 감옥의 탄생』. 서울: 나남.
- _____. 1998. 박정자 옮김.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서울: 東文選.
- _____. 2007. 심세광 옮김. 『주체의 해석학』. 서울: 동문선.
- _____. 2010. 이규현 옮김. 『性の 역사 1. 지식의 의지』. 서울: 나남.
- _____. 2011. 오토르망 옮김. 『안전. 영토. 인구』. 서울: 난장.
- _____. 2012. 오토르망 옮김.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서울: 난장.
- 하비, 데이비드(Harvey, David). 2005. 『신제국주의』. 최병두 옮김. 파주: 한울아카데미.
- 허경. 2012. 『미셸 푸코의 ‘담론’ 개념: ‘에피스테메’와 ‘진리놀이’의 사이』. 《개념과 소통》, 9, 5~32쪽.
- 황영주. 2007. 『중세 유럽에서의 외교』. 《21세기 정치학회보》, 17(1), 177~195쪽.
- Agnew, J. A. 2009. *Globalization and sovereignty*.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 Benevolo, Leonardo. 2003. 『世界都市史』. 윤재희·지연순·전진희 옮김. 서울: 세진사.
- Dunton, Larkin. 1896. *The World and Its People*. New York; Boston; Chicago: Silver Burdett.
- Garrison, Fielding H. 1929. *An introduction to the history of medicine*. Philadelphia. London: W. B. Saunders Company.
- Jessop, B. 2000. 『전략관계적 국가이론』. 유범상 외 옮김. 서울: 한울아카데미.
- Le Maître, Alexandre. 1973. *La Métropolité*. Paris: Editions d'histoire sociale.
- Mann, M. 1984. "The autonomous power of the state: its origins, mechanisms and results." *European Journal of Sociology*, 25(2), pp. 185~213.
- Paasi, Anssi. 1996. *Territories, boundaries, and consciousness*. Chichester. England; New York: J. Wiley & Sons.
- Revel, Judith. 2002. *Le vocabulaire de Foucault*. Paris: Ellipses.
- Sonn, J. W. and D.-W. Gimm. 2013. "South Korea's Saemaul (New Village) movement: an organisational technology for the production of developmentalist subjects." *Canadian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34(1), pp. 22~36.
- Spivak, G. 1988. "Can the Subaltern speak?." L. Grossberg and C. Nelson (eds.). *Marxism and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pp. 271~313.
- Wheaton, H. 1864.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Sampson Low,son.